V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방안

1. 한국형 포용보험의 필요성 및 지향점

가. 이론적 배경 및 글로벌 사례의 특징

현대 사회는 기후위기, 급속한 고령화, 플랫폼 경제 확산 등 이질적인 거시위험들이 상호작용하며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다중위기(Polycrisis) 환경, 즉 초위험사회(Super-risk Society)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초위험사회에서는 위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져 전통적 상업보험의 대전제인 '대수의 법칙'과 '독립성 가정'이 무력화된다. 결과적으로 민간 보험시장은 거대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고 보장범위를 축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령자, 유병자, 비정형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시장에서 먼저 배제되는 보장 공백(Protection Gap)과 위험의 역진성(Risk Regressivity)이 발생한다. 단 한 번의 외부충격만으로도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보험의 부재는 단순한 금융소외를 넘어 국가 전체의 복지재정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회는 시장실패를 방치하지 않고 각국이 처한 특수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대안이자 거시경제적 안전망으로서 포용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 혁신 궤적으로 나타난다.

첫째, 개도국은 인프라 공백을 극복하고 물리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생존형 혁신'을 추구한다. 물리적 금융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신흥국(필리핀, 인도 등)에서 포용보험은 빈곤층을 거대 자연재해와 생계 위협으로부터 즉각 구제하는 생존형 혁신 모델로 작동한다. 인도는 국가 주도의 디지털 신분증(Aadhaar)과 통합결제망(UPI)을 결합한 공공 디지털 플랫폼(비마 수감)을 구축하여 수수료와 서류작업 없이 취약계층이 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하이테크 인프라를 완성했다. 필리핀 역시 핀테크 플랫폼(GCash)과 파라메트릭(지수형) 보험을 결합하여 기후재난 시 손해사정 없이 보험금을 즉각 지급함으로써 영세농민의 파산을 막아내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필리핀의 전당포 네트워크나 인도의 지역 여성요원(비마 바학) 및 비즈니스 특파원

(BC) 등 현지 지역사회 내에 이미 축적된 사회적 신뢰자산을 포용보험 유통의 최전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은 사회적 배제 해소와 지능형 돌봄을 결합하는 '적응형 혁신'을 추구한다. 고도화된 금융시장을 보유한 선진국(영국, 일본 등)에서 포용보험은 정교한 알고리즘에 의해 합법적으로 배제되는 취약계층의 불평등을 교정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고립을 예방하는 적응형 혁신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영국은 데이터 세분화에 의해 가난한 지역 거주자나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는 '빈곤 프리미엄(Poverty Premium)' 현상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규제당국(FCA)이 직접 소비자의무 프레임워크를 강제하여 금융배제 문제를 적극 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임대주택 세입자 등에게 가재도구 보험을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자동 내장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규제완화(소액단기보험제도)를 통해 고독사, 치매 배상책임 등 틈새 사회적 리스크를 상품화했다. 특히 현금 보상을 넘어 우체국 배달망(인적 자원)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안부 확인(미마모리) 서비스를 보험과 융합[120]함으로써 포용보험을 재무적 안전망에서 사전 예방 및 실물 돌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포용보험은 자국이 직면한 특수한 위기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상업보험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High-Tech)'과 '인적 네트워크(High-Touch)의 신뢰'를 유기적으로 융합한 '피지털(Phygital) 생태계'로 수렴하고 있다. 이는 포용보험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국가의 사회적 회복탄력성(Social Resilience)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전략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한다.

나. 한국형 모델의 필요성: 한국 사회의 구조적 역설과 복합 취약성

글로벌 포용보험이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의 '접근성 확보'나 선진국의 '점진적 제도 보완'으로 발전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의 포용금융 및 보험 환경은 매우 이질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 시장은 개도국형 미소보험과 선진국형 보장격차 해소 모델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한국의 취약계층이 직면한 위기는 절대적 인프라의 부족이 아니라 고도화된 시스템 내에서 오히려 소외가 가속화되는 '구조적 역설'에서 기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

120) 캄포생명이 우체국 미마모리 방문서비스를 자사 치매·노후보험에 내재화하여 제공한 '임베디드 바우처', '미청구 보험금 대행 청구', '계약 실효 방지를 위한 지정대리청구 연계' 등의 구체적 융합 사례는 본 보고서 제3장의 '일본 우정그룹의 미마모리 서비스'를 참고할 것

1) 보장격차의 역설: 양적 포화 속의 질적 빈곤

개발도상국의 보장 공백이 '보험상품과 자본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면, 한국의 보장 공백은 '과잉 공급 속의 배제'라는 역설적 형태를 띤다. 한국 보험시장의 역설은 10% 전후의 높은 보험침투율[121]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장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병국 외(2024)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질병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 중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율은 58.4%에 달한다. 특히 2030 세대의 보장격차 비율은 60%를 상회하고 있어, 양적인 가입 확대가 가계의 실질적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표 V-1〉 실손의료보험 보장격차

(단위: %)

구분		실손의료보험금 비율	보험 보장격차
연령대	20대 이하	33.9	66.1
	30대	39.5	60.5
	40대	45.6	54.4
	50대	42.2	57.8
	60대	46.9	53.1
전체		41.6	58.4

자료: 오병국 외(2024), p. 62

스위스 리(Swiss Re)의 전 세계적 사망보장 격차(Mortality Protection Gap) 및 회복탄력성 지수 추세(〈표 V-2〉 참조)와 결부해 볼 때, 한국은 상품의 중복 가입을 통한 양적 팽창에 매몰되어 있다. 정작 생애주기적 위험 노출이 큰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비정형 노동자는 치밀해진 언더라이팅과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필수 보장에서 밀려남으로써 위험발생 시 가계의 실질적 생계를 보호하는 질적 보장(Qualitative Protection)에 실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질적 보장이란 단순한 보험 가입률이나 보유계약 건수 중심의 양적 보장(Quantitative Coverage)과 대비되는 개념을 말한다. 이는 스위스 리(Swiss Re Institute)와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2015b) 등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① 가구주 사망·질병 등 충

121)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을 이용해 보험침투율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보험침투율은 2015년 12.7%에서 2020년 11.5%, 2024년 9.4%를 기록함

격 발생 시 실제 필요자금 대비 보장 규모의 충분성(Adequacy of Protection), ② 취약계층의 불규칙한 소득흐름과 위험 특성에 맞춘 상품의 적합성(Appropriateness), ③ 복잡한 청구 장벽 없이 실제 보상이 이루어져 빈곤 추락을 방어하는 실질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보장 실효성을 의미한다.

〈표 V-2〉 지역별 SRI 사망 회복탄력성 지수 및 보장격차

(단위: %, 10억 달러)

구분	회복탄력성 지수			보장격차		
	2023	2024	추세	2023	2024	추세
전체	43.6	44.4	▲	423	432	▲
북미	51	52.6	▲	86	85	▽
중남미	45.7	49.6	▲	44	42	▽
선진 EMEA주)	60.1	60.2	▲	47	49	▲
신흥 EMEA	24.9	24.5	▽	90	96	▲
선진 AP주)	61.9	62.7	▲	28	27	▽
신흥 AP	30	30.5	▲	128	133	▲
중국	38.3	39.2	▲	74	76	▲
선진시장	56.1	57.1	▲	161.4	160.6	-
신흥시장	31.7	32.6	▲	261	271	▲

주: EMEA(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AP(Asia-Pacific)

자료: Swiss Re Insitutute(2026. 4. 14.), "2. Global mortality protection gap"(https://www.swissre.com)

2) 속도의 역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와 다차원적 정책·문화 시차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전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조차 10년이 소요된 반면, 한국은 불과 6년(2018~2024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속도의 역설(Paradox of Speed)은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수치 차원을 넘어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사회·경제·문화 시스템 전반의 '제도적·인지적 지체'와 결합하고 있다.

첫째, 공적연금의 제도적 미성숙과 고령화 속도 간의 정면충돌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수세기에 걸친 경제성장과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 충분히 부유해진 후 고령화(Rich before old)를 맞이한 것과 달리, 한국은 1988년에야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성숙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현재의 노인세대는 극심한 소득절벽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는 만성적인 노인 빈곤율을 구조화하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둘째, 전통적 가족 부양체계의 급속한 붕괴와 공적 돌봄 안전망의 지체이다. 부모 봉양을 당연시하던 유교적 사적 부양체계가 불과 한 세대 만에 해체되면서 65세 이상 1인 독거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흡수해야 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나 공적 요양 인프라는 고령화의 폭발적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

셋째,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과 한계노동으로의 급속한 전락이다.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50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속도는 가장 빠른 반면, 공적연금 수급연령까지의 소득공백과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중장년층과 노인층이 안전망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이나 옥외 플랫폼 노동 등 고위험 한계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속도 또한 기형적으로 빠르다.

넷째, 민간보험시장의 고령 리스크 데이터 축적의 시차이다. 초고령사회가 급습하면서 민간보험업계 역시 치매, 만성질환, 장기간병 등 시니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인수할 경험생명표와 손해율 데이터를 축적할 물리적 준비기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고위험 노인층에 대한 가입 거절, 보장 제한, 할증요율 부과로 이어지며 민간 영역에서의 보장 사각지대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다섯째, '빨리빨리' 압축성장이 초래한 극심한 문화지체(Cultural Lag)와 심리적 소외이다. 한국사회 특유의 속도지향적 '빨리빨리 문화'는 디지털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물리적 교체를 크게 앞당겼으나, 이를 수용하고 소화해야 할 인간의 인지적·정서적 적응속도 간에는 심각한 괴리가 발생했다. 사회학자 William Ogburn(1922)의 지적처럼, 급변하는 물질문화(모바일 뱅킹, 무인화, 비대면 심사 등)의 속도를 비물질문화(금융리터러시, 심리적 신뢰, 사용습관 등)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분출되고 있다. 느린 이용자를 기다려주지 않는 초고속 시스템 전환 속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심리적 무력감과 박탈감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융과 사회안전망 전체로부터의 자발적·비자발적 단절을 가속화한다.

결국 한국사회의 속도의 역설은 '초고속 고령화와 기술 전환이 초래하는 위험의 팽창 속도'를 '국가의 공적 복지와 민간보험, 그리고 개인의 인지적 적응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다차원적 불일치'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형 포용보험은 제도적 시차를 메우는 유연한 비례규제와 함께 초고속 사회에서 뒤처진 이들의 문화적·심리적 지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인간 친화적 대면 접점(High-Touch)'을 필수적으로 장착할 필요가 있다.

3) 기술의 역설: 초연결 인프라가 낳은 디지털 배제

인도나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서 모바일 기술과 핀테크 플랫폼은 금융소외 계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도약과 포용의 도구로 작동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역설적으로 고도화된 디지털 금융화가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차단하는 기술의 역설(Paradox of Technology)을 낳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비용절감과 편의성 중심의 공급자 논리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다차원적 배제 메커니즘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오프라인 점포의 급격한 축소와 물리적 접점의 강제 축소이다.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의 실물 지점 및 대면 창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복잡한 금융거래나 보험금 청구시 대면 안내와 인적 지원에 의존해 온 고령층, 장애인, 비문해자들의 물리적 접근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디지털 정보화 격차와 탐색·인증 장벽의 심화이다. 70대 이상의 스마트폰 활용률이 60%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고, 고령층의 종합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70% 안팎에 머무는 현실에서 복잡한 모바일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생체인증 등), 난해한 금융 앱 UI/UX, 텍스트 중심의 전자문서는 취약계층에게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는 제도와 상품이 존재하더라도 이용자 스스로 가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자기배제(Self-exclusion)를 유발한다.

셋째, 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한 정교한 배제(Granular Exclusion)와 가격차별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머신러닝 언더라이팅은 위험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 이면에는 통계적 정형 데이터가 부족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저신용 취약 차주를 인수 불가 고위험군으로 낙인찍어 배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는 영국의 빈곤 프리미엄 사례처럼 취약계층일수록 위험을 방어할 자본이 부족함에도 알고리즘에 의해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받거나 시장에서 축출되는 구조적 차별로 이어진다.

넷째, 비대면 다이렉트 중심 유통에 따른 혜택의 역진성이다. 플랫폼 임베디드보험이나 저렴한 다이렉트 상품, 헬스케어 리워드 등 디지털 금융혁신의 과실은 기술 친화적인 청·장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반면 정작 건강 및 소득 위험이 큰 고령·유병자 계층은 복잡하고 사업비가 높게 책정된 전통적 대면상품에 머물거나 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됨으로써 기술혁신이 계층 간 보장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역진적 결과를 초래한다.

다섯째, 효율성 중심 기술 지상주의가 초래한 인적 인터페이스(Human Touch)의 증발이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인건비 절감이라는 미시적 경제성에 매몰되면서 취약계층의 맥락적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적 신뢰를 제공하던 상담·돌봄의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해지고 있다. 기계적 알고리즘과 챗봇은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복합적 고통을 해석하지 못하며, 기술에 대한 불신과 정보 비대칭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한국사회의 기술의 역설은 '초연결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 속도'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수용성 및 인간적 배려의 결여' 사이의 단절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형 포용보험은 기술을 배제의 수단이 아닌 포용의 지능형 엔진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현장 설계사 및 공공 복지망의 대면 돌봄과 결합하는 '피지털(Phygital) 하이브리드' 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위험의 역진성과 다차원적 복합취약성의 증폭

기후위기와 신종 재난이 일상화되는 초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도달하지 않는다. 자원 보유량이 적은 계층일수록 위험노출 빈도는 높고 이를 흡수할 재무적 완충력은 취약하여 동일한 크기의 충격에도 훨씬 깊은 타격을 입는 '위험의 역진성(Risk Regressivity)'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재난위험은 단일한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고 고령화, 저소득, 열악한 주거환경,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거미줄처럼 얽혀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다차원적 교차취약성(Cross-Vulnerability)'의 양상을 띠며, 그 구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충격의 건강·소득 위험의 전가, 즉 기후 불평등이다.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대두되었다. 단열과 냉·난방이 취약한 쪽방촌·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약 120만 가구)과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배달 등 옥외 노동자(약 260만 명), 영세 농어민(약 220만 명)은 기후충격 발생 시 온열질환(건강 위협)과 작업 중단에 따른 일당 단절(생계비 위기)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둘째, 단일 위험 범주를 초월한 다차원적 교차 취약성의 구조화이다. 현실의 취약계층은 '고령이면서 만성질환을 앓는 독거노인', '장애를 가졌으면서 디지털 금융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기후재난에 무방비인 영세 자영업자 및 다중채무자'처럼 복수의 위험요인이 중첩되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44.4%, 장애인 가구가 13%에 달하듯 단일한 인구통계학적 범주로 분절된 기존의 복지 및 상업보험 체계로는 이러한 복합위기를 방어하기 어렵다.

셋째, 기존 정책보험의 물적 손실 보상 편중과 소득·돌봄 공백이다. 풍수해보험 등 기존 정책보험은 주택·온실·상가 등 물적 재산의 직접적 파손 보상에 집중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한 취약 노동자의 소득상실이나 건강 악화, 간병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 아울러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중심의 단체보험 역시 복잡한 사후 손해사정 절차와 지방정부의 단년도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입자의 자발적 기여 및 재보험 분산체계가 결여된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넷째, 재무적 완충력 결여와 재난발 빈곤함정(Poverty Trap)의 고착화이다. 재무적 방어막이 없는 소득 하위 계층은 단 한 번의 외부 재난충격을 수습하고 원래의 경제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 상위계층보다 월등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122] 특히 다중채무와 저소득·저신용이 겹친 취약차주 약 300만 명이 만성적인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어 완충재 없는 외부충격은 고금리부채 의존과 자산 매각으로 이어져 세대 간 빈곤을 고착화하는 방아쇠로 작동한다.

결국 한국사회의 기후 불평등과 교차 취약성은 일상화된 재난 충격과 취약계층의 구조적 무방비 상태가 결합하여 시스템 리스크[123]로 전이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포용보험은 단순한 사후적 재산 복구를 넘어 공공 데이터와 연동된 지수형(파라메트릭) 긴급 소득보장 및 사회적 돌봄망과의 결합을 통해 2차 금융파산을 차단하는 거시적 안전판으로 기능해야 한다.

---

122) Hallegatte et al.(2017)에 따르면 재난 충격이 닥쳤을 때 자산과 보험 완충력이 결여된 소득 하위 20% 취약계층은 상위계층보다 충격 회복에 걸리는 기간이 3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

123) 본 연구에서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는 개별 가구의 미시적 피해(Idiosyncratic Risk)에 머물지 않고, 취약계층의 연쇄 탈락이 금융권·복지재정·실물경제 전반으로 전이(Contagion)되어 사회적 회복력을 마비시키는 '사회·금융 복합 시스템 리스크'를 의미함. 구체적으로는 ① 기후재난 및 생계단절로 인한 한계 차주의 채무불이행이 제2금융권·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 부실로 전이되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 ② 빈곤층 급증으로 지자체 긴급구호 및 공적 복지재정에 과부하를 초래하는 재정리스크, ③ 옥외·물류 노동력 공급 중단에 따른 실물경제 공급망 마비 위험을 포괄함. 이는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감독 녹색금융협의체(NGFS)에서 주장하는 기후 물리적 충격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그린 스완(Green Swan)' 위험 전이 메커니즘과도 궤를 같이함

〈표 V-3〉 한국사회의 4대 구조적 역설과 포용보험의 대응전략

구분	주요 현상 및 구조적 한계	취약계층 노출 위험	한국형 포용보험(KII) 대응전략
보장격차의 역설 (Protection Gap)	보험침투율 10% 안팎의 양적 포화 이면에 취약계층 실질 보장 결여	실손의료비 미보장률 58.4%, 질병·사고 시 빈곤층 추락	필수위험 번들링 (사망+상해+질병) 및 초저가형 설계 (월 1~5천 원)
속도의 역설 (Paradox of Speed)	세계 최단기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공적연금 미성숙 및 제도적 지체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수준, 간병·돌봄 파산위험 급증	현금성 보상 한계 극복을 위한 실물 간병·가사 돌봄서비스 결합
기술의 역설 (Paradox of Tech)	비대면·디지털 금융전환 가속으로 점포 축소 및 대안정보 부재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차단 및 언더라이팅 배제	행정복지센터·우체국 등 공공 거점망과 연계한 피지털 전달체계
위험의 역진성 (Risk Regressivity)	기후변화 피해가 반지하·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	소득·주거·건강 취약성이 결합되어 외부충격의 파괴력 증폭	공공 기상데이터 연계 지수형 무청구 긴급생계비 즉각 지급

자료: 저자가 작성함

다. 한국형 포용보험의 개념 및 지향점

1) 한국형 포용보험의 개념

글로벌 포용보험의 발전 경로는 크게 '개도국형 금융포용 모델'과 '선진국형 복지보완 모델'의 두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위험 지형은 이 두 모델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독특한 복합성을 지닌다.

개도국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금융인프라와 금융기관 접점이 태부족인 절대 빈곤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금융접근성(Financial Access)과 소액의 생계구호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보험침투율과 초연결 디지털 금융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포용성은 단순한 계좌개설이나 보험상품 가입 기회의 제공이 아니라, '양적 포화 이면에 은폐된 질적 보장 사각지대와 빈곤전락 위험을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진국의 포용적 보험 메커니즘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경제력과 성숙한 공적연금·사회보장망을 전제로 시장의 잔여적 틈새를 메우는 '성숙 복지보완형' 성격을 띤다. 반면 한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어버린(Old before rich)' 연금 미성숙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압축적 기술 전환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 복지의 지체와 문화지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선진국형의 점진적·잔여적 방식으로는 다차원적 복합위기에 처한 한계 생활자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이러한 개도국 및 선진국 모델과의 구조적 차별성을 종합할 때, 한국형 포용보험(KII, K-Inclusive Insurance)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한국형 포용보험이란 공적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지체와 민간 상업보험의 시장배제 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보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고속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속 다차원적 교차 취약계층의 생애위험과 재난 충격을 신속히 완충하고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공·사 협력 기반의 지능형 하이브리드 안전판이다."

한국형 포용보험은 단순한 소액·저가 상업보험이나 시혜적 공적 부조가 아니며, 다음의 3대 구성요소를 갖춘 독자적 위험관리 메커니즘이어야 한다.

첫째, 보장 대상의 실질적 확장을 통해 교차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 빈곤층에 국한하지 않고 급속한 인구·기술·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민간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공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고령·유병자,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후재난 노출계층 등 '다차원적 한계 생활자'를 핵심 수혜집단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보장 방식의 기능적 다변화를 통한 소득과 돌봄의 결합이다. 기존 정책보험의 한계였던 사후적·물적 손실 중심의 보상을 넘어 기후 충격이나 급성질환 발생 시 생계를 즉각 방어하는 지수형 소득보장 및 실물 간병·돌봄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의 하이브리드화를 추진하는 피지털 접근성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입·지급 절차를 극단적으로 간소화하는 지능형 기술(High-Tech)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대면 접점(High-Touch)을 결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2) 한국형 포용보험의 지향점

한국형 포용보험이 일회성 복지사업이나 영세한 특약상품에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대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

첫째, 단순 생계구호에서 '사회적 회복탄력성(Trampoline Model)'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의 안전망이 추락하는 개인의 최저생계를 밑바닥에서 받아내는 그물망(Safety Net)에 그쳤다면, 한국형 포용보험은 외부충격을 흡수한 뒤 신속하게 원래의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튕겨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트램펄린(Trampoline) 역할을 지향한다. 긴급 유동성 공급과 생활재건 보장을 통해 재난 충격이 가계파산과 만성적 빈곤 함정으로 전이되는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그림 V-1〉 기존 안전망 vs. 한국형 포용보험 비교



둘째, 기술 중심 효율화에서 '피지털 포용 생태계'로의 전환이다. 공급자 중심의 비용절감형 비대면 전환을 지양하고, 기술과 인간적 배려가 공존하는 피지털 인프라를 구축한다. 모바일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언더라이팅과 무청구 자동지급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우체국, 지자체 복지 창구, 지역 설계사 등 신뢰할 수 있는 대면 네트워크를 매개체로 적극 결합하여 디지털 배제를 극복한다.

셋째, 분절된 개별 공급에서 민·관 오케스트레이션(Public-Private Orchestration)으로의 전환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민간보험회사의 자율적 ESG 활동이라는 분절된 이분법을

넘어선다. 공공은 데이터 인프라 개방, 비례적 규제완화, 보험료 매칭 지원을 담당하고 민간은 정밀한 위험인수와 혁신상품 개발, 효율적 보상시스템 운영을 맡아 각자의 비교우위를 결합하는 정교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2. 지속가능한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방안

포용보험은 개별 보험회사가 시혜적으로 출시하는 단일 상품이나 정부의 일회성 예산 지원만으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란 다차원적 복합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① 공공의 데이터·재정 인프라, ② 상업보험의 위험인수 및 상품개발 역량, ③ 빅테크의 피지털 유통망, ④ 지역사회의 실물 돌봄망이 유기적인 가치사슬로 결합된 다원적 협력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처럼 분절된 주체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는 민·관 오케스트레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상품구조, 유통, 보상, 거버넌스의 4대 핵심 축에서 다음과 같은 포용보험 생태계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가. 상품 및 인수(Underwriting) 구조의 혁신: 다차원 위험 맞춤형 설계

기존 상업보험의 상품구조와 위험인수 관행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소득, 표준체 중심의 건강 상태, 명확한 물적 피해 증빙을 전제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다차원적 복합 취약계층을 제도권 보장망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한국형 포용보험의 상품 생태계는 사후적·물적 손해배상에서 선제적 소득방어로, 정형화된 금융정보 중심의 언더라이팅에서 대안데이터 기반의 동적 인수로, 무거운 종합 패키지 상품에서 초경량 모듈형 구조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1) 지수형(Parametric) 기후·재난 긴급 소득보장 도입

제2장에서 살펴본 사회적 회복탄력성 이론에 따르면, 외부 재난충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한계가구는 생계유지를 위해 고금리 부채에 의존하거나 자산을 급매 처분하면서 영구적인 빈곤의 함정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등 국내의 기존 정책보험 실태를 살펴보면, 보장의 범위가 주택·온실 등 물적 시설의 직접적 파손에만 편중되어 있어 재난 직후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가장 절박한 위기인 작업 중단에 따른 소득공백(일당 단절)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라메트릭 기후보험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폭염·한파 노출 노동자와 영세 농림어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발령 일수나 국지성 강우량 등 객관적 공공지표(Trigger)가 사전에 설정된 임계치에 도달하면 별도의 현장 손해사정이나 영수증 증빙 없이 정액의 긴급 일당 및 생계비가 당일 무청구 방식으로 자동지급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대안데이터 기반 AI 정밀 언더라이팅 및 인수장벽 완화

제2장에서 살펴본 정보비대칭 이론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형 데이터의 부족은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괄적인 인수거절이나 과도한 신용할당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실제로 국내 현황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 플랫폼 종사자, 취약 차주는 물론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다수를 점유하는 고령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은 높은 심사 문턱과 과도한 할증으로 인해 민간 보장망 진입이 차단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 인슈어테크의 정밀 언더라이팅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비금융 대안정보를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 인수 심사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통신비 및 공과금 성실납부 실적, 모빌리티·배달 플랫폼 운행기록,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취약계층의 실질적 위험도를 정밀 측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 특히 고령·장애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및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하여 '만성질환 관리 순응도'를 위험률에 반영하는 동적 언더라이팅을 도입하고, 병력 고지항목을 2~3개 핵심 문항으로 압축한 포용형 간편심사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3) 생애주기·취약유형별 마이크로 모듈 보장체계 구축

제2장에서 살펴본 소비자선택 및 위험분산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한 의무 특약이 다수 포함된 고비용 다담보 패키지 상품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가입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 구조이다. 이는 국내 취약계층이 처한 위험이 인구통계학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분화되어 있음에도 기존 시장상품이 이를 유연하게 흡수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심화시켜 왔다.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도 보험규제개발국(IRDAI)이 주도한 '비마 비스타르(Bima Vistaar)'의 성공사례를 발전시켜야 한다. 비마 비스타르는 생명·건강·상해·재산 등 취약계층의 필수 위험을 하나의 표준화된 기본상품으로 묶되, 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보장한도와 담보를 레고 블록처럼 선택할 수 있게 한 초간편 패키지 상품이다. 이를 국내에 적용하여 취약계층이 월 1,000원~5,000원대의 초소액 보험료로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핵심위험만을 선별·조립할 수 있는 레고 스타일의 마이크로 모듈형 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취약계층 실태를 반영하여 주거 취약가구 및 독거노인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특수청소 보장', 장애인 가구를 위한 '이동 보조기기 파손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국 긴급 송환 및 다국어 의료·법률 통역 지원' 등 기존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생활밀착형 틈새 위험을 독립 모듈로 제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안전판을 완성해야 한다.

나. 전달체계 및 유통의 다변화: 피지털(Phygital) 인프라 구축

전통적인 대면 설계사 중심의 유통채널은 높은 사업비와 수수료 구조로 인해 소액·저가 중심의 포용보험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부족하며, 반대로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다이렉트 채널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문해력 격차로 인해 금융소외를 심화시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포용보험의 유통 생태계는 디지털 기술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사회의 인적 접점이 제공하는 신뢰성과 친밀성을 결합한 피지털 하이브리드 유통망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1) 공공 마이데이터 및 생활밀착형 임베디드 유통망 혁신

국내 정책보험의 운영 실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지원제도는 가입자가 해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후 신청주의'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복지포털(복지로, 정부24 등) 및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에 맞춤형 포용보험 혜택과 신청 절차를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타깃형 자동 매칭 알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제3장에서 확인한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의 사례를 바탕으로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26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임베디드 보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노무 제공자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내에 보험 청약과 결제 절차를 내재화하고, 배달 1건 또는 운행 1시간 단위로 보험료가 자동 정산·차감되는 마이크로 과금 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와 유통비용을 극소화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거점 기반 에이전트 네트워크의 복원

급격한 디지털 금융화는 비용절감의 편익 이면에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시장에서 소외시키는 디지털 역설을 수반한다. 이러한 기술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CGAP·AFI 등 국제기구가 취약계층 포용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권고하는 에이전트 네트워크 모델을 적극 수용하여 전국 단위의 오프라인 접점을 확보하고 있는 공공 및 준공공 인프라를 포용보험의 지역 유통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및 도서 산간지역까지 촘촘히 뻗어 있는 우체국 금융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그리고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을 포용보험 유통의 공식 거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효하다. 현장 사정에 밝은 복지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퇴직 금융 전문인력을 '포용보험 전담 코디네이터'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스마트기기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대면 설명과 밀착 가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3) 온·오프라인 융합형 피지털 통합 전달체계 구축

제2장에서 정립한 연결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채널이 상호 단절되지 않고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옴니채널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한다. 상품에 대한 탐색과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초기 권유는 신뢰도 높은 지역사회의 대면 접점이 수행하되, 복잡한 본인 인증과 인수 심사, 보험료 수납 및 계약관리 등 후속 행정절차는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디지털 시스템이 일괄 처리하도록 분업체계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의 비례성 원칙에 발맞추어 모집 관련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저위험·단순 구조의 소액 포용보험에 대해서는 복잡한 전자서명과 대면 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에이전트와 전속 설계사들이 소액상품 취급을 기피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ESG 경영 가점 부여, 정책적 모집대행 수수료 보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

다. 보상 혁신 및 실물 돌봄서비스 연계: 트램펄린 기능의 실질화

기존 상업보험의 보상체계는 피보험자가 손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고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야 하는 '사후 신청주의'와 엄격한 손해사정 절차를 전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보 접근성과 법률·행정 대응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보험금 수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재난이나 질병 직후 현금만 지급하고 종결되는 단편적 금전 보상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일상 복귀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형 포용보험의 보상 생태계는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무청구 원스톱 자동지급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금전 보상을 넘어 실물 돌봄·간병 및 생활재건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트램펄린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

1) 공공 행정망 연계 무청구 원스톱 자동지급체계 구축

현행 보험금 청구 및 손해사정 절차의 복잡성은 긴급한 구호와 생계 회복이 절실한 다중위기 상황에서 보험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핵심 장애물이다. 국내 정책보험 실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재난 피해자가 진단서나 파손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지자체나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 주에서 수개월의 시차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생계 충격을 방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절차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의 파라메트릭 보험 등 글로벌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피보험자의 별도 청구행위 없이도 보험금이 즉시 지급되는 공공망 연계 자동지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의 기후특보 데이터, 소방청·행정안전부의 재난피해 집계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및 입원 코드 등을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의 전산망과 실시간 API로 연동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지수 충족이나 응급실 내원 등 객관적 지급요건이 확인되는 즉시 취약계층의 지정 계좌나 디지털 바우처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자동 입금되는 선지급 후정산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사후 금전보상을 넘어선 실물 간병·돌봄 서비스 결합

제2장에서 분석한 '서비스 부재형 보험의 한계 구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지급되는 일회성 현금 보상만으로는 정보소외와 돌봄 인프라가 결여된 취약계층의 빈곤 고착화를 막을 수 없다. 특히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 보상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기 쉬우며, 취약계층이 수령한 보험금을 질 높은 의료·돌봄 서비스로 직접 전환하는 데 따르는 거래비용이 매우 크다.

이에 고령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독거 만성질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지급방식을 현금과 현물·돌봄 바우처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다변화해야 한다. 급성 질환이나 재해 발생 시 전문 간병인 파견, 병원 동행서비스, 긴급 가사 간병 및 식사 지원서비스 등을 보험금 대신 매칭해 주는 실물 급부형 특약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단순한 금전 지급자를 넘어 가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능동적 리스크관리 파트너로 기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3) 사회적 회복탄력성 완성을 위한 일상복귀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제2장에서 규명한 사회적 회복탄력성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취약계층을 위한 보상체계의 궁극적 지향점은 재난 이전의 삶으로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회복 탄성계수의 극대화에 있다. 재난 충격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영세 소상공인이나 플랫폼노동자에게 일회성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의 재개나 소득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 프로세스의 종착지를 단순 보험금 지급 완료 시점이 아닌 생업복귀 시점으로 재정의하고,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및 서민금융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집중호우나 화재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기 컨설팅 및 저금리 경영안정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기후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취약 노동자에게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회복 상담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재취업 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범사회적 재활 거버넌스를 완성해야 한다.

라. 재정 지속가능성 및 공·사 리스크 풀링 체계 구축

포용보험이 일회성 복지 시혜나 단년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다원적 재원조성 체계와 공·사 간 다층적 위험분산(Risk Pooling)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 포용보험 상생기금 조성, 소득수준 및 취약 유형별 차등 매칭지원 바우처 설계, 그리고 초위험사회 거대재해 충격을 완충하는 국가재보험기금 설치의 3대 재정안정화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1) 민·관 공동 포용보험 상생기금 조성 및 다원적 재원 확보

기존 지자체 중심의 단년도 예산 지원이나 개별 금융사의 파편화된 사회공헌기금은 경기 변동과 단기 정책기조에 따라 재원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는 취약성을 노출해 왔다. 이러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취약계층 재정 보조금, 민간 금융권의 사회공헌·ESG 기금,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금융자산 등을 통합 결합한 '민·관 포용보험 상생기금(K-Inclusive Fund)'을 신설하여야 한다. 기금의 초기 규모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타깃 1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폭염·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된 옥외 노동자 및 독거노인 10만 명에게 연 5만 원 수준의 포용보험을 전액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필요재원은 약 50억 원 수준이다. 이는 단일 대형 보험회사의 연간 사회공헌 예산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운용수익의 일부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모이다.

기금의 영속적인 유입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투자와 비즈니스 가치가 선순환하는 공유가치창출(CSV)[124] 메커니즘을 기금운용 구조에 내재화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CSV 메커니즘의 내재화'란 민간보험회사가 기금에 재원을 출연하는 행위가 단순한 매몰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이익과 온·오프라인 신시장 개척이라는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로 직결되도록 유인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

124)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창한 개념으로, 기업이 이윤 창출 후 남은 재원을 사회에 단순 환원하는 전통적인 사회공헌(CSR)을 넘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전략을 말함

첫째, ESG 경영성과 및 제도적 인센티브와의 연계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상생기금에 출연한 재원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평점 및 ESG 경영평가에 최우선 지표로 반영한다. 개별 보험회사가 수익성이 낮은 소액보험을 단독으로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공동기금에 출연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비용 대비 ESG 성과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다.

둘째, 미래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국내 신시장 파이프라인 제공이다.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보험회사에게는 향후 공공데이터와 결합되어 새롭게 창출된 위험률 통계(예: 플랫폼노동자, 씬파일러 등)에 대한 선행 접근기회를 부여한다.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방치했던 취약계층 시장을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포용보험을 통해 첫 금융접점을 맺은 청년이나 프리랜서들이 향후 소득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자사의 정규 상업보험 우량고객으로 유인(Lock-in)하는 장기 비즈니스 확장이 가능해진다.

셋째,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 확보이다. 한국 보험회사들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시장은 전통적 상업보험보다 마이크로인슈어런스(초소액보험) 형태의 진입이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프랑스 AXA, 독일 Allianz 등 유럽의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신흥국 진출 시 현지 통신사 등과 제휴한 포용보험을 매개로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고객을 선점하는 BOP(Bottom of the Pyramid)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연착륙한 바 있다.[125] 국내 상생기금 참여를 통해 포용보험 상품개발, 피지털 유통망 제휴, 대안데이터 활용 등의 실무적 노하우(Track Record)를 선제적으로 축적한 보험회사는 향후 해외 신흥시장 진출 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제도적 혜택과 국내외 신시장 선점이라는 경제적 수익을 얻게 되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상생기금은 외부의 강제 없이도 자생적인 영속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125) 유럽 주요 보험회사들의 신흥국 포용보험 진출 및 BOP(Bottom of the Pyramid)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Impact Insurance Facility의 이슈 브리프(Issue Brief) 및 마이크로인슈어런스 네트워크(Microinsurance Network)가 발간하는 연례보고서(The Landscape of Microinsurance)를 참조할 것. 대표적으로 AXA는 전담부서(Emerging Customers)를 통해 신흥국 통신사 등과 제휴한 초소액보험 모델을 선도하고 있으며, Allianz는 2017년 자사의 벤처캐피털인 Allianz X를 통해 스웨덴계 모바일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스타트업인 비마(BIMA)에 9,66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아시아·아프리카 저소득층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음

2) 소득수준 및 취약유형별 차등 매칭지원 바우처 제도화

포용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액 무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교한 차등 바우처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전액 무상지원은 초기 가입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으나 가입자의 관심 저하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

따라서 수혜 대상의 소득분위와 근로형태의 불안정성을 정밀 측정하여 차등 매칭지원 비율을 표준화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의 '빈곤구제 농업보험'[126]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험료의 70~80%를 매칭 지원하고 농민은 20%만 부담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가입률을 비약적으로 높인 바 있으며, 인도의 서민 생명보험(PMJJBY) 역시 빈곤층에 대해 주정부가 보험료를 100% 대납하거나 부분 보조하는 차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예를 들어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험료의 90~100%를 상생기금에서 보조하되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50~70% 수준을 매칭 지원하고 최소 10~30%의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부담 장치는 가입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위험관리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공적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V-2〉 소득수준 및 취약유형별 차등 매칭지원 바우처 체계

계층 구분	지원 대상 및 위험 특성	공적 매칭 지원율	가입자 본인 자부담율
제1계층 : 최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 장애인 등 절대 빈곤층의 필수 생명·재산위험 즉각 구제	90 ~ 100% 상생기금 전폭 지원	0 ~ 10% 최소 안전판 확보
제2계층 : 복합위험층	차상위계층 · 플랫폼 노동자 · 영세 농어민 기후재난 및 생계위험 노출 한계 노동자	50 ~ 70% 상생기금 + 지자체 매칭	10 ~ 30% 월 1,000 ~ 5,000원 수준

주요 정책 기대효과

전액 무상지원이 초래하는 가입자의 무관심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액 자부담 체계를 통해 가입자의 능동적 위험관리 유인과 권리의식을 확립함.

자료: 저자가 작성함

126) 중국은 농가 빈곤퇴치 및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결합하여 보험료의 대부분(70~80%)을 보조하고 농민 자부담(약 20%)을 결합하는 다층적 매칭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중국 농업보험의 재정 보조금 분담구조 및 소농 보호 혁신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World Bank(2007) 및 UNDP IRFF를 참조할 것

3) 거대재해 및 꼬리위험 완충을 위한 국가재보험기금 설치

초위험사회에서 빈번해지는 기후재난, 대형 전염병 등 동조화 위험(Covariate Risk)은 특정 시점에 막대한 보험금 청구를 유발하여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의 자본을 일시에 잠식시킬 위험이 크다. 이러한 꼬리위험에 대한 방어막이 부재할 경우 민간보험회사는 지급여력 악화를 우려하여 취약계층 대상 상품 인수를 회피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가칭 포용금융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부 예산 기반의 '포용보험 국가재보험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보험회사가 일차적인 위험을 인수하되, 사전에 설정된 임계 손해율을 초과하는 대규모 거대손실(Stop-loss)에 대해서는 국가재보험기금이 최종 지급보증(Back-stop)을 제공하는 다층적 손실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회사의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극한 기후충격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거시경제적 완충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4) 국가재보험 연계 K-ICS 위험계수 하향 및 비례적 자본규제 적용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리스크 풀링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보험회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포용보험 상품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포용보험은 태생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험료 수준이 매우 낮게 책정된다. 만약 현행 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 일반 상업보험과 동일한 잣대의 높은 위험계수(Risk Charge)를 적용받아 과도한 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심각한 기회비용과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어 상품 공급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포용보험 국가재보험기금을 통한 거대재해 손실 흡수 구조와 연계하여 포용보험에 특화된 K-ICS 위험계수 하향 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가 사전에 설정된 임계 손해율을 초과하는 꼬리위험을 최종적으로 지급보증하여 리스크를 전가받는 구조가 확립된다면, 민간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극단적 위험 노출액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계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의 비례성 원칙을 국내 자본규제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즉 리스크가 국가로 전이되어 위험의 변동성이 통제된 포용보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보험위험 및 대재해위험 산출 시 표준 대비 대폭 완화된 전

용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재보험과 연계된 비례적 자본규제의 적용은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하고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와 공급 확대로 이어져 가입자 규모를 비약적으로 늘림으로써 포용보험 생태계 내에서 대수의 법칙이 온전히 작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관 합동 리스크 풀링을 완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마. 민·관 오케스트레이션 거버넌스 및 비례적 규제혁신

앞서 살펴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공·사 리스크 풀링 체제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참여 주체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는 민·관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거버넌스와 제도적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하향식 동원 방식을 탈피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술혁신을 유인하기 위해 독립된 전담 컨트롤타워로서의 포용보험재단 설립, 포용보험 공공 인프라로서의 재단의 4대 핵심 기능 수행, 비례성 원칙에 입각한 투트랙 규제혁신, 그리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부처 정책협의체 구축 등 거버넌스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1)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기존 공공기관 활용 vs 포용보험재단 설립

한국형 포용보험의 중장기적 안착과 일관된 정책 집행을 이끌어갈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존의 정책금융 공공기관에 포용보험 총괄 기능을 위탁·통합하는 방안(제1안)이며, 둘째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출연하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상의 비영리 포용보험재단을 신설하는 방안(제2안)이다. 두 방안은 아래와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 기존 공공기관 활용안(제1안)의 장·단점

기존 공공기관 활용안은 무엇보다 신속한 제도집행과 행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장점을 지닌다. 별도의 법인 신설이나 대규모 초기 조직구성 절차 없이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의 전국적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프라와 공공 전산망을 즉각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관리 중인 휴면금융자산과 서민금융 출연금 체계를 포용보험 재원과 연계하기 용이

하며, 저소득 취약차주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초기 제도도입 비용을 최소화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편의성 이면에는 포용보험의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기능적 부적합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핵심 정체성은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채무조정 등 여신 공급 및 부채관리에 특화되어 있다. 반면 포용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기반한 손해율 통제, 정밀 언더라이팅, 거대재해 리스크 풀링 등 고도의 계리적·수리적 위험관리 전문성이 요구된다. 여신 중심 기관에 이를 맡길 경우 보험 메커니즘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단순 대출연계형 신용보험 위주의 공급에 머무는 '자금융통 중심의 편식'을 낳을 우려가 존재한다. 둘째, 경영 및 운영의 경직성이다.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예속되어 정원, 예산, 조직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사전 통제와 연례 경영평가를 받는다. 이는 핀테크 플랫폼과의 실시간 API 연동이나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임베디드 제휴 등 급변하는 인슈어테크 혁신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하향식 동원에 따른 민간보험회사의 이탈이다. 관 주도의 공공기관 체제는 민간보험회사를 자발적 협력자가 아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일방적 동원 대상으로 취급하기 쉬우며, 이는 보험업계로 하여금 포용보험을 장기적 비즈니스가 아닌 준조세 성격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하여 단기실적 채우기 이후 시장에서 이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나) 독립 비영리 포용보험재단 설립안(제2안)의 장·단점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신설안은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PPP)과 전문성, 혁신 기동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가진다. 제2안의 장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민·관 파트너십 구축이다. 정부와 민간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지분과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를 단순 피규제자가 아닌 주도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127] 둘째, 보험 및 위험관리 전문성의 집중이다. 여신과 분리된 순수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계리적 리스크 분석,

127)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부족한 소액 포용보험을 개별적으로 개발·유지하는 것보다, 재단이라는 공통 인프라에 자본을 출연하여 리스크와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ESG 경영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임. 국내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정부 기금과 민간보험회사를 조율하는 비영리 재단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가 있으며, 글로벌 차원에서도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다수 민간 금융사가 공동 출연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 네트워크(Microinsurance Network)가 민관 협력 재단의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음

국가재보험기금 수탁 관리, 리스크 풀링, 표준 포용보험 규격화 등을 독자적으로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경영의 민첩성과 혁신 주도력이다. 공공기관법의 경직된 규제 틀을 벗어나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가짐으로써 핀테크 플랫폼과의 자유로운 제휴, 인슈어테크 샌드박스 추진, 클라우드 기반 공동 IT망 운영 등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신설안은 특별법(가칭 「포용금융지원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민간 간 초기 출연금 분담 조율에 일정 수준의 정책 시차와 입법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신설 법인의 초기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다) 대안 평가 및 결론

두 대안을 비교할 때, 기존 공공기관 활용안(제1안)은 단기적인 행정 편의성은 높으나 보험 고유의 전문성 결여와 관료적 경직성으로 인해 초위험사회의 복합위험에 대응하는 혁신 생태계를 견인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비영리 포용보험재단 신설안(제2안)은 초기 입법 및 설립 준비기간이 요구되지만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자발적으로 끌어들이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유연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우월성을 지닌다. 따라서 일회성 서민 지원을 넘어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포용보험의 본질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비영리 포용보험재단의 설립이 전략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포용보험재단 중심의 완결된 피지털 생태계는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적 지향점(Utopia)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법률 제정과 대규모 기금 조성을 일거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행정·정치적 수용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 완결된 생태계를 궁극적인 목표(Phase 3)로 설정하되, 단기적으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실용적 우회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장의 법 개정이나 재단설립 없이도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를 통해 일부 대형 보험회사와 핀테크 기업,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후재난 취약계층 10만 명 대상 긴급 소득보장 파라메트릭 보험'과 같은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손해율 데이터와 민·관 협력의 효능감을 축적한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포용보험지원법 제정과 재단설립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추진한다면, 본 연구의 모델은 탁상공론이 아닌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지탱하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표 V-4〉 포용보험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대안 비교

구분	제1안 (기존 공공기관 활용)	제2안 (포용보험재단 설립)
추진 방식	• 기존 인프라 및 인력 통합	• 정부 및 민간보험회사 공동 출연
장점	• 법령 개정 및 조직 신설 불필요(신속 도입) • 취약차주 DB 및 휴면금융자산 연계 가능	• 민간보험회사의 주도적 참여 용이 • 위험률 산출 등 보험 고유 전문성 발휘 • 핀테크 등과 유연한 제휴 가능
단점	• 여신중심 조직으로 보험고유의 전문성 결여 • 기재부 통제로 인한 경영 기동성 부족 • 민간의 장기적 이탈 우려	• 특별법 제정 등 초기 입법 시차 발생 • 정부와 민간의 초기재원 분담 조율 필요
결론	• 단기적 행정 편의성은 높으나, 포용보험 혁신을 위한 기능적 부적합 및 경직성 존재	• 초기 설립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성과 민관 파트너십 기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

2) 포용보험재단의 4대 핵심기능

신설되는 포용보험재단은 단순한 정책지원 창구를 넘어 포용보험 생태계 전체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역할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재보험기금 수탁관리를 통한 리스크 및 자본 풀링 기능이다. 이는 민간 소액전업사들이 자체 자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지적 거대재해나 전염병 등 꼬리위험을 공적으로 흡수하고 분산하는 최종 안전판 역할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의 국가재보험 수탁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단이 민간보험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재보험료를 수취하고 풀링한다. 이후 사전에 설정된 임계 손해율을 초과하는 대규모 거대손실 발생 시 재단이 기금을 통해 초과 손실분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비례 또는 비비례 재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직접 체결하고 집행한다. 이러한 극단적 위험의 국가로의 전가는 민간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제도 요구자본 산출 시 대재해 위험계수를 대폭 경감시킴으로써 자본확충 부담이라는 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상품공급을 활성화하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최적화된 K-포용보험 클라우드 구축 및 공유를 통한 공동 IT 플랫폼 제공 기능이다. 통상 수십에서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보험 코어 시스템[128] 구축

비용은 자본금이 영세한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소액전업사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다. 이에 재단은 상품개발, 계약관리, 손해사정 모듈은 물론 IFRS17 결산 및 K-ICS 산출 전산모듈까지 기본 탑재된 개방형 API 기반의 표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대여함으로써 혁신 기업들이 막대한 IT 투자비용 없이 오직 취약계층을 위한 아이디어와 상품 경쟁력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 생태계[129]를 완성할 수 있다.

셋째, 범정부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가교(Data Gateway) 기능이다. 민간 영리 보험회사가 취약계층의 복지수급 이력이나 질병 데이터 등 정부 공공망에 접속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익성과 중립성을 지닌 포용보험재단이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보험회사 사이에서 신뢰받는 데이터 완충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재단은 보건복지부의 복지행정망,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망, 기상청의 기후데이터망과 단일 통로로 연계망을 구축한다. 이후 민간보험회사에는 민감한 원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고 표준화된 API를 통해 포용보험 가입적격 여부나 객관적 재해발생에 따른 지급조건 충족 여부와 같은 비식별 검증 신호만을 안전하게 중계한다. 이러한 재단 중심의 데이터 가교 모델이 확립되면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취약계층에게는 복잡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무서류 간편가입과 재난 발생 시 즉각 보험금이 입금되는 무청구 원스톱 자동지급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한국형 비마 비스타르 모델 설계를 통한 표준 포용패키지 규격화 및 보급 기능이다. 인도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되 한국의 높은 의료비와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3대 핵심위험인 생명(가장 사망 시 유족 긴급생계비 1,000~2,000만 원), 상해 및 질병(입원 일당 및 간병비), 재산(기후·풍수해로 인한 주거 및 작업장 파손)을 하나의 기본상품으로 묶은 초간편 모듈을 설계한다. 특히 본 패키지는 취약계층 가구의 실질적 회복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총보험료를 월 15,000~30,000원 수준으로 적정화

128) 보험 코어 시스템(Core Insurance System)은 보험회사의 상품설계부터 계약 체결, 보험료 수납, 언더라이팅, 보상(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본연의 핵심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전산 중추(계정계 시스템)를 말함.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들도 수백억 원을 들여 자체 전산을 구축하는 대신 소액단기보험 전용으로 개발된 표준 패키지 소프트웨어(ASP, SaaS)를 도입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129)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 PnP) 생태계란, 컴퓨터에 USB를 꽂으면 복잡한 설치과정 없이 즉시 작동하듯, 표준화된 공통 인프라에 참여자가 접속(Plug)만 하면 별도의 자체 시스템 구축 없이 즉시 비즈니스를 가동(Play)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의미함

하되, 앞서 제시한 상생기금의 매칭 바우처(70~90% 지원)와 결합하여 가입자 본인은 월 1,000~5,000원 안팎의 자부담금만으로 두터운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다. 재단은 면책조항을 극단적으로 축소하고 직관적인 인포그래픽을 적용한 1페이지 분량의 시각화된 표준약관을 규격화하여 시장에 무료로 보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계리적 요율산출 비용을 제거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이해도와 신뢰를 높여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3) 공급 다원화를 위한 투트랙 비례적 규제혁신

포용보험이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 주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과 건전성규제 체계는 거대자본과 복합 조직을 갖춘 대형 상업보험회사를 표준 모델로 삼아 획일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일률적 규제는 막대한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기존 대형사에게는 포용보험 취급에 따른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반대로 파괴적 혁신 역량을 지닌 신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나 스타트업에게는 거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가 권고하는 비례성 원칙을 국내 규제체계에 도입하여 공급자의 자본 규모, 위험 프로파일, 비즈니스 특성에 맞추어 인센티브와 규제 강도를 차등화하는 투트랙 비례적 규제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가) 트랙 1: 기존 대형 보험회사 대상 포용보험 공인인증제 및 패키지 인센티브 구축

자본력과 전국적 판매망, 고도화된 언더라이팅 역량을 보유한 기존 대형 보험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무적·행정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보상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포용보험재단은 취약계층 타깃 적합성, 사업비 절감을 통한 초저가 요율구조, 면책조항 축소 등 공익적 표준요건을 충족한 상품을 공식적인 포용보험으로 지정·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인증을 획득한 상품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3대 패키지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

첫째, 건전성 자본규제(K-ICS) 부담의 경감이다. 인증된 포용보험 상품은 앞서 설계한 국가재보험기금 및 공·사 리스크 풀링 체계와 직접 연동된다. 극단적 꼬리위험이 국가로 전

가되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통제되므로 신지급여력제도상의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계수 및 대재해 위험계수를 대폭 인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대형 보험회사는 포용보험을 대량 인수하더라도 요구자본 적립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제도적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둘째, 법정 기금 출연금 요율 감경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출연금 산정 시 보험회사가 공급한 포용보험 보유계약 금액이나 상생기금 출연 실적에 비례하여 출연금 납부액을 공제·감면해 주는 '상계 인센티브제'를 신설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소액 저마진 상품을 판매하면서 겪는 수익성 저하를 비용절감으로 보전해 주는 현실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감독평가 및 ESG 경영평가의 최우선 가점 부여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상생금융 종합지수 평가항목에 포용보험 인증 상품의 공급 실적과 유지율을 핵심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포용금융 우수 금융사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유예, 신사업 인허가 시 가점 부여 등 체감도 높은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나) 트랙 2: 신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대상 진입장벽 완화 및 간이규제 전면 적용

기존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국내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를 부활시키고, 핀테크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과감한 간이규제 트랙을 신설해야 한다.

첫째, 법정 최저자본금 요건의 현실적 하향 조정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은 2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복잡한 인프라 구축비용까지 감안하면 혁신 스타트업에게는 여전히 과도한 장벽이다. 일본 금융청이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00만 엔으로 낮추어 수많은 특화 보험회사를 출현시킨 것처럼, 국내 역시 순수 포용보험만을 취급하는 전업사에 대해서는 최저자본금을 대폭 완화(예: 3~5억 원 수준)하여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둘째, IFRS17 시가평가 의무 유예 및 간이 책임준비금 적립 허용이다.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순수 소멸성 상품만을 취급하는 소액단기전업사에 대해 대형 상업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수천억 건의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 계산해야 하는 IFRS17 결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잉규제이다. 따라서 소액전업사에 대해서는 IFRS17 적용을 유예하고, 수납

된 보험료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단순 적립하는 '미경과보험료 기준 간이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셋째, 복합 K-ICS를 대체하는 '간이 지급여력제도' 신설이다. 방대한 계리 인력과 복잡한 리스크 측정 모델이 필요한 현행 K-ICS 체계 대신 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춘 '단순 지급여력비율' 제도를 도입한다. 시장위험이나 금리위험 등 불필요한 측정 항목을 배제하고 오직 기본 보험인수위험과 유동성위험만을 간편하게 측정하도록 규제 프레임워크를 단순화함으로써 스타트업이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비용 없이 본연의 상품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 투트랙 규제 혁신의 종합적 기대효과

이러한 투트랙 비례규제가 정착될 경우, 대형 상업보험회사는 K-ICS 할인 및 법정비용 감경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대규모 자본과 조직을 투입하여 포용보험의 거시적 공급 저변을 넓히고 대수의 법칙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동시에 신규 소액전문사는 간이규제와 가벼운 전산 인프라를 무기 삼아 플랫폼노동자, 주거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 등 대형사가 포착하지 못하는 미세한 틈새위험을 파괴적 아이디어로 공략하는 혁신적 보장 모델을 창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형사의 규모의 경제와 안정성', '소액전문사의 민첩성과 혁신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다원적이고 역동적인 포용보험 공급 생태계가 완성된다.

4)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범부처 포용보험 정책협의체' 확립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의 성공적인 안착은 단일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나 금융권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포용보험이 방어하고자 하는 위험은 단순한 금융 소외에 그치지 않고 빈곤(보건복지부), 기후재난(행정안전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불안정 노동(고용노동부), 지역사회 돌봄(지자체) 등 국가복지 및 안전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개별 법령과 단년도 예산에 갇혀 파편화된 정책을 집행할 경우, 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행정의 시장실패'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일관된 국가 안전망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최고위 거버넌스로서 '범부처 포용보험 정책협의체'의 법제화와 실질적 가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가)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의 배경 및 당위성

포용보험 정책을 범부처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조적 현실에서 기인한다.

첫째, 금융당국 중심 접근방식이 지닌 태생적 한계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지급여력 감독, 금융시장 질서 유지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복지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거나, 옥외·플랫폼 노동현장의 열악한 근로실태를 개선하고, 지자체 재난 현장의 실물 구호 및 통합돌봄 체계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데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금융의 논리만으로 사회보장과 재난안전 영역을 포괄하려 할 경우, 제도가 금융상품의 공급 측면에만 치우쳐 현장 수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책적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공공 데이터와 행정 자원의 극심한 부처별 분절(Silo) 현상이다. 포용보험의 핵심 인프라인 '대안데이터 기반 AI 정밀 언더라이팅'과 '공공망 연계 무청구 원스톱 자동지급'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정부 공공 데이터의 실시간 결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수급 이력, 행정안전부의 재난 통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 데이터, 고용노동부의 비정형 노동자 소득·노무 데이터, 국세청의 과세 정보가 각 부처의 고유 전산망 내에 칸막이로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 단절은 취약계층의 자격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재난 시 긴급 생계비를 즉시 지급하는 포용보험의 핵심 메커니즘을 마비시키는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기존 정책보험 및 지자체 안전망과의 중복 지원과 보장 사각지대의 심화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및 재난안전의무보험,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특례, 각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 가입·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등 다양한 공적 안전망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제도는 부처 및 중앙-지방 간 체계적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가 중복 보상되는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반면, 재난 직후 일당 단절에 따른 소득공백이나 질병 발생 시의 실물 간병공백과 같은 가장 절박한 위험은 제도 사이의 틈새에 방치되는 보장 왜곡이 누적되고 있다.

나) '범부처 포용보험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3대 핵심 조정 기능

이러한 분절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민·관 가교 기구인 포용보험재단이 참여하는 법정 정책협의체를 특별법(가칭 포용금융지원법)에 명문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본 협의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범정부 공익 목적 데이터 공유 표준지침 수립을 통한 '데이터 칸막이 철폐'이다.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마련한다. 복지부의 차상위 자격 정보, 행안부의 재난피해 확인 정보, 고용부의 노무 제공자 플랫폼 정보가 포용보험재단의 데이터 가교를 통해 민간보험회사의 상품 설계 및 자동지급 검증 신호로 원활하게 중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데이터 개방협약을 주도하고 감독한다.

둘째, 공적 복지·정책보험과의 역할 분담 및 정합성 조정을 통한 '정책 칸막이 철폐'이다. 지자체의 단년도 예산에만 의존하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이나 긴급 재난지원금 체계를 포용보험과 유기적으로 재조정한다.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포용보험 상생기금의 매칭 바우처 재원으로 전환하고, 물적 복구비 중심의 기존 공적 지원을 포용보험의 긴급 소득보장 및 실물 간병서비스와 결합하는 '공적 부조와 민·관 포용보험 간 역할 분담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지역 복지 전달체계와의 온·오프라인 현장 결합 지원을 통한 '전달체계 칸막이 철폐'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를 포용보험의 공식 안내 및 대면 접점(피지털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망을 개방한다. 복지 전담 공무원과 복지관 종사자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포용보험 혜택을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교육 및 업무 매뉴얼을 보급하고 현장 인센티브를 체계화한다.

다) 범부처 거버넌스의 종합적 기대효과

'범부처 포용보험 정책협의체'가 확립되면, 포용보험은 단순한 개별 금융상품의 차원을 넘어 '금융(금융위)+복지(복지부)+재난 안전(행안부)+고용 안전망(고용부)이 결합된 국가

거시 통합 안전판'으로 격상된다. 부처 간 데이터와 재정의 칸막이가 제거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정책 수혜자인 취약계층은 단 한 번의 행정 접점만으로도 복지와 보험의 통합적인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안전망 생태계'를 완성하게 된다.

3.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안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가. 단계별 추진 전략 및 거버넌스 이행 원칙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의 구축은 특별법 제정 및 비례적 규제완화(제도), 상생기금 조성 및 공공 클라우드·데이터 가교 구축(인프라), 그리고 기존 대형사와 신규 소액전업사의 상품 공급(시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국가전략 과제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과제를 일거에 완벽히 구축하려 할 경우, 제도설계의 시행착오와 초기 재정투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정책 추진동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생태계의 조기 안착과 정책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반 조성기(1~2년 차) →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확장기(3~4년 차) → 자생적 생태계 완성 및 고도화기(5년 차 이후)'로 이어지는 3단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관통하는 거버넌스 이행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1) 거버넌스 이행원칙: 단계적 스핀오프(Spin-off) 인큐베이팅 모델

포용보험재단이 본연의 4대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 출연금 확보, 독자적인 조직망 및 이사회 구성 등 최소 2~3년 이상의 입법적·행정적 준비기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단 설립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정책 집행을 유예한다면 취약계층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라는 시급한 정책적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행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거버넌스 전략으로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단계적 스핀오프(Spin-off) 인큐베이팅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1단계 기반 조성기(1~2년 차)에는 이미 전국적인 서민금융 전달체계와 휴면금융자산 운용 역량, 취약계층 데이터베이스를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가칭 '포용보험 추진단(T/F)'을 설치하여 정책 인큐베이터로 활용한다. 추진단은 초

기 상생기금의 시범출자 관리, 지자체 바우처 매칭 시범사업, 한국형 비마 비스타르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및 기초 공공데이터 연계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재단 설립 이전이라도 현장 중심의 포용보험 공급을 속도감 있게 견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2단계 본격 확장기(3~4년 차)에 접어들어 특별법 제정과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면, 서민금융진흥원 내 추진단을 비영리 공익법인인 '포용보험재단'으로 정식 분리·독립(Spin-off)시킨다. 이는 기존 정책서민금융(대출·보증) 업무와 보험(위험보장) 업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능적 혼선 및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국가재보험기금 수탁관리, K-포용보험 클라우드 운영, 공공데이터 가교 중계 등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적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2) 3대 핵심 축(제도·인프라·시장)의 동시적·단계적 연계 원칙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견지해야 할 핵심 원칙은 '제도 정비', '공공 인프라 구축', '시장 공급 활성화'의 3대 축이 상호 보조를 맞추며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비례적 규제혁신(제도)만 단행되고 공통 IT 클라우드나 재보험(인프라)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영세 소액전업사의 진입은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공공 인프라만 완비되고 대형사 인센티브나 간이규제(제도)가 지연된다면 시장에 상품이 출시되지 않아 인프라가 유휴화되는 정책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3대 축의 세부과제들이 정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동시에 실행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 인프라의 가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민간 공급자의 자발적 시장참여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

나. 1단계(1~2년 차): 기반 조성 및 제도화기(인큐베이팅 단계)

1단계 기반 조성기는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법령 제정, 범부처 거버넌스 가동, 시범 재원 조성, 그리고 표준상품 모델을 정립하는 제도적 인큐베이팅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전산망 구축이나 전면적 사업 확장을 지양하고, 기존 서민금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도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실증적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과 계리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한다.

1)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특별법 제정 및 비례적 규제 입법화

포용보험의 지속가능한 공급과 공공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포용금융지원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보험업법을 대폭 개정하는 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공익 목적 데이터 가교 역할을 위한 법적 특례를 명문화한다. 포용보험재단이 정부 공공망(복지부, 행안부, 건보공단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자격 여부 및 재난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중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의 공익적 데이터 처리와 가명 정보 결합에 관한 명확한 면책 및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 대형 상업보험회사를 기준으로 설계된 일률적 건전성 규제를 탈피하여 자본금 3~5억 원 수준의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 IFRS17 시가평가 유예 및 미경과보험료 기준 간이 책임준비금 적립 허용, 단순 지급여력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 인슈어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물꼬를 튼다.

2) 범부처 거버넌스 공식 발족 및 인큐베이팅 추진 주체 가동

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재난·노동 행정을 하나로 묶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범부처 포용보험 정책협의체'를 공식 발족한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자체 협의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1단계 기간 동안 부처 간 데이터 개방협약 체결, 기존 정책보험(풍수해보험, 시민안전보험 등)과의 중복 보장 조정 가이드라인 수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우체국 금융창구와의 오프라인 전달체계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율한다.

동시에 독자적인 재단 설립에 소요되는 입법·행정적 시간을 고려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가칭 '포용보험 추진단(T/F)'을 설치하여 정책 인큐베이터로 가동한다. 추진단은 금융당국 및 협의체의 지휘 아래 상생기금 시범출자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집행, 2단계에서 출범할 포용보험재단의 정관 마련 및 시스템 아키텍처 사전 설계를 총괄한다.

3) 한국형 비마 비스타르 표준 포용패키지 가이드라인 정립 및 약관 표준화

민간보험회사들이 상품개발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에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단 주도로 취약계층 특화 표준상품 가이드라인을 규격화한다. 생명(가장 사망 시 유족 생계비), 상해·질병(입원 일당 및 간병 지원), 재산(풍수해·주거 화재)의 3대 핵심위험을 하나로 결합한 단일 표준 패키지를 설계하며, 복잡한 특약과 면책조항을 대폭 축소한 1페이지 분량의 직관적인 시각화 표준약관을 제작하여 시장에 무료로 보급한다.

총보험료는 실질적인 가계파산 방어가 가능하도록 월 15,000~30,000원 수준으로 적정화하되, 바우처 매칭 지원과 결합하여 소비자의 실제 체감 부담은 월 1,000~5,000원 선이 되도록 계리적 요율 및 보장구조를 사전에 규격화하여 고시한다.

4) 민·관 상생기금 시범출자 및 지자체 연계 바우처 시범사업 착수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시장의 초기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 금융권의 자발적 사회공헌 출연금과 정부 매칭 예산, 휴면금융자산을 결합한 '시범 포용보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시범 기금을 바탕으로 특정 취약계층 밀집 지역이나 참여 의지가 높은 선도 지자체(시·군·구)를 공모·선정하여 '포용보험 차등 바우처 매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험료의 90%를, 차상위계층 및 옥외·플랫폼노동자에게는 50~70%를 상생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매칭 보조하고, 가입자의 최소 자부담(10~30%) 체계를 실증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가입률, 손해율 추이, 도덕적 해이 발생 여부 등의 실증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2단계 본사업 확장 시 적용할 국가재보험 손해율 임계치와 K-ICS 위험계수 인하 폭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기초자산으로 활용한다.

다. 2단계(3~4년 차):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확장기(본격 도약 단계)

2단계 확장기는 1단계에서 다진 법적 기반과 실증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를 전면 가동하고 민간 시장의 상품공급을 전국 단위로 본격 확산시키는 도약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내에서 인큐베이팅을 마친 추진 조직을 독립 공익법인으로 분리·출범시키고 공동 IT 플랫폼, 국가재보험, 공공 데이터 가교, 온·오프라인 피지털 전달체계 등 4대 핵심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가동함으로써 포용보험 생태계의 비약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한다.

1) 비영리 공익법인 '포용보험재단'의 공식 독립 출범(스핀오프 완성)

1단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 내에서 시범사업을 총괄하던 '포용보험 추진단'을 정식 분리하여 독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포용보험재단'을 공식 출범시킨다.

재단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금융권, 학계, 시민사회가 고루 참여하는 중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대출·보증) 업무와 보험(위험보장) 업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포용보험 공공 인프라의 운영과 국가재보험기금 수탁관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2) 'K-포용보험 클라우드' 공동 IT 플랫폼 가동 및 SaaS 대여 개시

재단 주도로 구축된 개방형 API 기반의 표준 코어 보험전산망, 즉 'K-포용보험 클라우드'의 본격적인 가동에 착수한다.

본 플랫폼에는 상품개발, 계약관리, 손해사정 모듈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의 최대 진입장벽인 IFRS17 결산 및 K-ICS 산출 전산 모듈이 기본 탑재된다. 재단은 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신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및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대여함으로써 혁신 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초기 전산 투자비(CAPEX) 없이 오직 아이디어와 상품 경쟁력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 환경을 시장에 구현한다.

3) 공·사 리스크 풀링(국가재보험) 가동 및 건전성규제 인센티브 본격 적용

민간보험회사의 출재 재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하고 정부 출연금을 안전판으로 결합한 '포용보험 국가재보험기금'의 실질적인 수탁관리와 집행을 개시한다.

재단은 인증 포용보험을 취급하는 민간보험회사들과 공식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설정된 임계 손해율(예: 150~200%)을 초과하는 국지적 거대재해나 대규모 손실(Stop-loss)을 공적으로 흡수·분산한다. 극단적 꼬리위험(Tail Risk)이 국가재보험으로 안전하게 전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참여 보험회사에 대해 신지급여력제도(K-ICS)상의 대재해 위

험계수 및 장기손해보험 위험계수를 대폭 인하 적용한다. 이로써 대형 상업보험회사들은 요구자본 적립 부담 없이 대규모 포용보험 상품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확보하게 된다.

4) 신뢰받는 제3자(TTP) 기반 데이터 가교(Data Gateway) 본격 운영

보건복지부의 복지행정망,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망, 기상청의 기후데이터망과 재단 간의 단일 전산 연계망을 본격 가동한다.

재단은 공공기관과 민간보험회사 사이에서 '신뢰받는 데이터 완충 허브'로 기능하며, 민간보험회사에는 민감한 원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고 오직 가명 처리된 표준 API를 통해 '포용보험 가입 자격 충족 여부'와 '기후·재난 발생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비식별 검증 신호만을 실시간 중계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취약계층 가입자에게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무서류 간편 가입'과 재난 발생 시 즉각 보험금이 입금되는 '무청구 원스톱 자동지급'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구현한다.

5) 전국 단위 피지털(Phygital) 전달체계 구축 및 현장 거점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피지털 전달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전담팀,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전국 단위 금융망을 보유한 우체국 창구를 포용보험의 공식 대면 안내 및 상담 거점으로 지정한다.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취약계층 발굴 시 포용보험 혜택을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 매뉴얼과 교육을 제공하며, 모바일 간편 가입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및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상담과 신청 대행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한다.

라. 3단계(5년 차 이후): 자생적 생태계 완성 및 고도화기(성숙·글로벌화 단계)

3단계 고도화기는 공공 주도의 제도화와 인프라 조성을 넘어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 역량이 시장을 주도하는 '자생적 포용보험 생태계'의 완성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비례적 간이

규제가 완전히 정착되어 신규 혁신 공급자가 대거 출현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이 비즈니스 실익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공유가치창출(CSV) 모델로 전환된다. 나아가 인슈어테크 기술 고도화를 통해 무서류·무청구 보장이 취약계층의 일상적 안전망으로 정착되며, 축적된 한국형 포용보험(K-Inclusive Insurance)의 제도·기술 패키지를 신흥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교두보 단계로 도약한다.

1) 비례적 간이규제 체계의 완전 정착 및 소액단기전업사 시장진입 촉진

1~2단계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대한 간이규제 프레임워크를 법적으로 완전히 정착시킨다. 자본금 3억~5억 원 수준의 진입요건 완화와 IFRS17 시가평가 유예, 미경과보험료 기준 간이 책임준비금 적립, 단순 지급여력제도(Simplified Solvency Margin)가 제도적으로 완결됨에 따라 수많은 핀테크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특화 협동조합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게 된다.

이들 소액전업사는 재단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 플랫폼노동자의 시간제 소득보장,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국지적 화재보장, 다문화가정 전용 실손 간병보장 등 기존 대형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초미세 틈새위험을 겨냥한 파괴적 혁신상품을 자율적으로 쏟아내는 다원적 경쟁구도를 완성한다.

2) 공유가치창출(CSV) 기반 자생적 선순환 시장구조 확립

정부 보조금과 시혜적 기부에 의존하던 초기 단계를 넘어 민간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성장 전략과 취약계층 보호가 완벽히 결합되는 지속가능한 시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대형 보험회사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포용보험 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대수의 법칙'을 조기에 완성하고, K-ICS 위험계수 인하 및 법정 출연금 상계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자본 효율성을 누린다. 동시에 포용보험을 통해 유입된 취약계층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때 자연스럽게 일반 상업보험 고객으로 전환되는 장기 고객 록인(Lock-in) 효과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포용보험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미래 잠재고객 확보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며, 외부 지원 없이도 상품을 자발적으로 유지·확대하는 자생력을 확보하게 된다.

3) 첨단 인슈어테크 기반 보장서비스 고도화 및 무청구 자동지급 일상화

AI, 사물인터넷(IoT), 공공 마이데이터가 결합된 지능형 인슈어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대상 보장서비스를 극대화한다.

재단의 데이터 가교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상청의 폭염·한파·집중호우 특보나 지자체의 재난 선포 정보와 가입자의 위치 데이터가 실시간 연동되어 별도의 피해 입증서류나 복잡한 손해사정 절차 없이 기준 충족 시 사전에 약정된 긴급 소득보전금이 모바일 계좌로 즉시 입금되는 '파라메트릭(지수형) 무청구 자동지급'이 보편화된다.

또한 대안데이터(통신비 납부, 소액결제 이력, 플랫폼 활동 로그 등)를 활용한 AI 정밀 언더라이팅이 자리 잡아 금융이력이 전무한 씬파일러(Thin-filer)나 고령 유병자도 할증이나 거절 없이 단 몇 초 만에 가입이 완료되는 '포용적 디지털 보장환경'이 일상화된다.

4) 'K-포용보험 모델'의 글로벌화 및 신흥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한국이 성공적으로 구축한 포용보험의 정책 거버넌스, 비례적 규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K-포용보험 클라우드' 전산 솔루션을 글로벌 표준모델로 브랜드화하여 해외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동남아·남미 등 금융포용성 확대와 기후재난 대응이 시급한 신흥국을 대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형 포용보험 시스템을 공적개발원조(ODA) 및 정책 컨설팅 패키지로 수출한다.

국내 대형 보험회사와 혁신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국내에서 검증된 표준 상품설계 역량과 클라우드 기반 코어 전산 인프라를 앞세워 거대한 해외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포용보험을 국가적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확장성을 달성한다.

〈그림 Ⅴ-3〉 한국형 포용보험 안착을 위한 3단계 추진 로드맵



자료: 저자가 작성함